

# 고 발 장

## 고발인 1.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이영선, 이상선, 하승수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로 177-2 4층

## 2. 함께하는 시민행동 '좋은예산센터'

대표 김주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 249-10 시민공간 나루 5층

## 3.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대표 이승휘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20 삼영빌딩 2층

고발 대표진술인 하승수

## 피고발인 1. 유동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 곽대훈(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수사의뢰)

3. 조경태(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4. 경대수(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5. 박덕흠(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6. 안상수(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고발인들은 위 피고발인1, 2를 형법 제347조 사기 혐의로(피고발인 2는 수사의뢰),  
피고발인 3내지6은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발합니다.

다 음

고발인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운동 및 예산감시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그리고 대표 고발진술인 하승수는 세금도둑잡아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을 아래와 같은 범죄혐의로 고발합니다.

## 1. 피고발인 유동수

피고발인은 2016. 12. 19. 'LH임대주택 관리기능 개선을 위한 과제'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 1천부 발간비로 490만원을 국회사무처에 청구(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급청구)를 했습니다. 또한 같은날 '기본권 중심의 개헌을 위한 과제'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 1천부 발간비로 49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2건 합계 980만원이었습니다. 위 2건의 정책자료집 인쇄를 맡긴 업체는 '디자인 0'이라는 업체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이 인쇄를 맡긴 디자인인쇄업체에 확인한 결과, 2천부가 아니라 10-20부만 인쇄한 것으로 드러났고, 980만원 중에서 818만원은 의원실 인턴비서의 통장을 통해 되돌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그 인턴비서는 의원실을 그만둔 상태이고, 인턴비서의 얘기로는 5만원권으로 돈을 찾아서 유동수 의원의 보좌관인 서00에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쇄부수를 터무니없이 부풀려서 국회사무처 공무원을 기망하여 국민의 세금을 빼먹은 것으로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2. 피수사의뢰인 꼭대훈

피고발인 꼭대훈은 2016년 12월 5일 국회사무처에 소규모용역비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연구용역 주제는 '대구성서 일반산업단지 혁신단지사업 사업시행 추진계획'이었습니다. 이 연구용역은 당시 대구의 한 산업디자인 업체에 용역을 맡겼고, 국회예산 5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나 이 업체는 보좌관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용역보고서는 100% 표절로 확인됐습니다. 이 연구용역보고서는 한 달 전인 2016년 10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대구시가 2억 원 규모로 발주한 입찰보고서

‘대구성서 일반산업단지 혁신사업 시행계획 수립’ 보고서를 100% 베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표지만 다를 뿐, 내용, 도표, 그림 등 모든 내용이 일치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보고서를 표지만 바꿔 베낀 연구용역보고서에 국회예산 500만 원이 지출된 것입니다.

이 연구용역은 사실상 연구용역을 수행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업체 대표는 곽대훈 의원실 이00보좌관과 선후배 사이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용역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합니다.

### **3. 피고발인 조경태, 경대수, 박덕흠, 안상수**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의 피고발인들은 다른 기관, 연구자, 정부부처의 자료들을 마치 의원실에서 만든 자료인 것처럼 의원실 명의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 **1> 피고발인 조경태**

피고발인 조경태는 2015년 9월 정책자료집 <창업기업의 성장과 폐업 그리고 고용>, <청년전용창업자금 성과분석 및 효율화 방안>을 발간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집은 2014년 12월에 중소기업연구원에서 발간된 <창업기업의 성장과 폐업 그리고 고용>, 그리고 2014년 12월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연구용역보고서 <청년전용창업자금 성과 분석 및 효율화 방안>을 제목은 물론 목차, 내용, 도표, 결론부분까지 통째로 베낀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연구원의 보고서는 “본지의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조경태 의원은 저자를 표시하는 부분만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놨을 뿐, 인용이나 출처 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 **2> 피고발인 경대수**

피고발인 경대수는 아래와 같이 2012년에서 2015년 사이에 3건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집들은 산림청 발표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용역보고서,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총서를 그대로 베낀 것입니다. 이 자료집의 발간비용으로 경대수 의원은 380만 원의 국회 예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대수 의원실 발간자료집	원자료
2015년 정책자료집 <산림복지 현황 및 개선과제>	2013년 산림청 발표자료 <산림복지 종합계획>
2013년 정책자료집 <농어촌 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 방안>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 용역보고서 (수행기관:공주대 산학협력단) <농어촌 마을 화살화를 위한 교육관련 제도 개선 방안>
2012년 정책자료집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안전관리 개선방안>	2012년 8월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총서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관리 방안>

### 3> 피고발인 박덕흠

피고발인 박덕흠은 2015년 10월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의 의미와 쟁점 검토’와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 제도의 활성화 방안’ 이라는 두 건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들은 피고발인 박덕흠이 이사장으로 있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인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의 의미와 쟁점 검토’,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제도의 활성화 방안’이라는 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목은 물론 목차, 내용, 각주까지 똑같습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전 연구물을 인용했다는 출처 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 4> 피고발인 안상수

피고발인 안상수는 2015년 12월 <해양수산정책의 새로운 대응전략>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합니다. 그러나 이 자료집은 아래의 4건의 보고서를 베껴서 만든 것입니다. 이 보고서 발간비 명목으로 피고발인 안상수는 890만원의 국회예산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습니다.

- 2015년 8월 한국수산물 수산정책연구소 <귀어 귀촌 실태조사 및 단기 중장기 발전방안 2015.08>
- 2013년 7월 10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발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안)>
- 2015년 5월 7일 해양수산부 보도 첨부자료 <크루즈산업 활성화 대책>
- 2015년 5월 7일 해수부 보도참고자료 <해양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리나 산업 전략적 육성 대책>

#### 4. 고발경위와 요청사항

고발인들은 2017년 초부터 독립언론인 뉴스타파와 함께 국회도서관 등에 올려져 있는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에 대해 표절여부를 조사해 왔습니다. 또한 국회 예산중 입법및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에 대해서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하여 국회로부터 자료를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허위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국민의 세금을 빼먹은 사례, 유명단체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사례 등에 대해 형법상 사기혐의로 지난 10월 24일 1차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당시에 고발된 국회의원은 이은재, 백재현, 강석진, 황주홍의원이고, 서청원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유동수 의원에게서 범죄혐의를 발견하게 되었고, 곽대훈 의원에게서도 범죄가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이전부터 조사해서 적발했던 저작권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도 추가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발인들이 고발과 수사의뢰를 한 건도 병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회사무처는 지금도 국회의원들이 국민세금으로 발주한 상당수 정책연구용역 보고서와 정책자료집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그 자료들을 보면 수많은 비리, 표절들이 발견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고발인들은 본 고발과 수사의뢰건만이 아니라 공소시효가 남은  
입법및정책개발비 전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것을 요청합니다. 국민세금이  
정당하게 사용하는지를 감시해야 할 국회에서 국민세금을 불법적으로 편취하고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다면, 이는 검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2018. 11. 20.

고발인 1. 세금도둑잡아라 (인)

2. 함께하는 시민행동 '좋은예산센터' (인)

3.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인)

#### 증거자료

1. 뉴스타파 기사
2. 유동수 의원실, 곽대훈 의원실이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청구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귀중